<화학산업 경쟁력을 배양하자!>

소다회 반덤핑 심의와 불공정

한국과 중국간의 무역마찰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소다회의 반덤핑공청회가 열림으로써 한-중 무역마찰이 심화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제소기업인 동양화학에서는 분위기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었는지 임직원 및 소다회 관계자 뿐만 아니라 「덩치를 자랑하는」 노동조합 관계자들까지 다수가 출영해 소다회 반덤핑공청회장을 압도했다고 한다.

국가경제가 파탄이 나든 석유화학기업들이 망해 자빠지든 소다회만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었을까…

반면, 피제소기업인 중국의 소다회 생산기업들은 단 한명도 얼굴을 내비치지 않았고, 수입기업인 삼성물산과 수요기업인 Rhodia Kofran이 중국산 소다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심히 부당하다」 역설했다고 들린다.

중국기업들은 왜 공청회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너무나도 가난한 나머지 한-중간 항공운임이 부담이 돼 그러했는지, 아니면 갑자기 수출주문이 폭주해 한국시장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서 그러했는지 정확한 내막은 알 길이 없으나 중국의 소다회 생산기업들이 가난하거나 한국시장에 관심이 없어서 공청회를 보이콧했다고 보는 소다회 관계자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한국시장에 관심이 많고, 몇톤이라도 더 수출하고 싶은 속내를 모르는 바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기업들은 굳이 반덤핑공청회에 참석해 정당성을 주장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왜 그러했을까? 중국의 소다회 한국수출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변호할 필요성이 없어서라면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정반대이니 우려스럽다고 표현하는 것이 알맞을 것이다. 중국기업들이나 중국정부가 평소에 덤핑수출을 극구 부인해왔다는 점에서 틀림없을 것이다.

무역위원회가 정당성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들이밀어도 엉뚱한 논거와 계산법을 동원해 덤핑혐의가 있다고 판정할 것이 뻔한 마당에 굳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음이 분명하다. 또 중국정부가 소다회 반덤핑 결심을 코앞에 두고 한국산 PE 수입을 전면금지한 마당에 실무적 논란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중국정부가 중국산 마늘에 대한 한국정부의 긴급수입관세 부과의 부당성을 PE 수입금지의 명분으로 제기하고 있으나, 마늘은 핑계에 불과할 뿐이고 소다회를 비롯한 중국산 화학제품에 대한 한국정부의 무리한 수입규제가 화근이 되고 있음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다. PP 수입도 금지하겠다고 나서는 판이다.

무역위원회가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시 국내 소다회산업에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할지 여부에 대해 양측의 주장을 청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무역위원회의 심사과정이나 공청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한지는 이미 오래됐다. 은밀한 거래가 결정적으로 역할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중국산 소다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이 1993년12월부터 무려 6년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해진다. 그것도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인디아를 제3국으로 놓고 간접 비교함으로써 억지판정을 유도하면서 까지…

동양화학은 공청회에서 1997년 이후 중국산 소다회의 수입증가율이 국내 소비증가율을 웃돌고 있기 때문에 중국산 소다회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손익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기간연장을 주장했으나 타당성이 결여됐음은 물론이다. 중국산 수입물량이 결코 많지 않음은 물론 가격도 덤핑수출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동양화학의 주장이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면 무역위원회가 소다회 공청회 자료를 배포하면서 동양화학이 주장하는 근거자료에 대해 모두 XXX 표시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싶을 뿐이다. 근거를 밝히기 어렵고, 삼성물산 및 Rhodia의 주장처럼 소다회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게 형성돼 오히려 소다회 수요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 아니던가?

무역위원회는 중국 수출기업들이 공청회에는 참석하지 않는 대신 소다회 수출가격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가격약속을 제의했고, WTO의 반덤핑협정 및 국내 관세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

명한 절차를 거쳐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의 기간연장 여부에 대해 2000년7월 최종 판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무역위원회가 국가경제를 위해 존재하는지 아니면 사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화학저널 2000/7/3>